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뉴스레터

33호 2015년 2월

등록일자 2014.09.24 등록번호 동작 라00076 발행일 2015년 2월 발행(33호) 발행인 표재석 편집인 노재화 발행처 (재)대한건설정책연구원 기획·편집·인쇄 경성문화사

대한건설정책연구원에서는 매월 뉴스레터를 발간하여 본원의 동정을 비롯하여 전문건설 관련 정책·제도의 주요 동향과 최신정보를 제공합니다.

권두사
연구원소식
최신건설정보
발간물안내





안녕하십니까?

대한전문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회장 방 무 천입니다.

추운 한파가 지나가는 겨울이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벌써부터 우리의 식탁에는 봄내음이 물씬 풍기는 봄나물이 등장하고 있으며, 금수강산은 봄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문건설인들도 움츠렸던 몸의 지지개를 펴고 올미년 청양의 해를 시작했으면 합니다.

지난해는 우리 전문건설인들에게 너무나 힘든 한해였습니다.

정부의 복지정책 우선으로 인한 공공부문 건설투자 감소와 세계경제의 둔화로 인한 기업의 시설투자 감소, 그리고 세월호 참사 이후 극심한 경제의 부진 등으로 우리 전문건설인들은 생존권을 위협받았습니다.

이에, 우리 울산시회는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 수년째 경영난을 겪고 있는 회원사들을 격려하고 협회를 중심으로 모두가 한마음으로 단합하여 난국을 헤쳐 나가자는 결의를 다지는 의미에서 작년 11월 25일, “울산 전문건설인의 밤 및 장학금 수여식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문건설업계가 어려운 가운데도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사회환원 차원에서 가정형편이 어려운 지역의 학생들을 돕기 위해 장학금 수여식도 거행했습니다.

존경하는 전문건설인 여러분!

우리 협회는 전문건설인들의 공사물량과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사물량 확보를 위해 소규모 복합공사의 적용범위를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하는 법안과 200억원 이상 공사는 의무적으로 분리발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습니다.

또한,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해 실적공사비 제도 개선을 건의했으며 그 결과, 정부는 100억원 미만 공사는 실적공사비 적용을 영구 배제하고, 100억원~300억원 미만 공사는 실적공사비 단가가 현실화 될 때까지 적용을 배제하는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전국의 4만여 전문건설사가 우리 협회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믿고, 한마음·한뜻으로 어려운 건설환경을 헤쳐나간다면 우리업계가 당면한 여러 현안들이 해결되리라 확신합니다.

끝으로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전문건설업계의 싱크탱크로서 각종 제도 개선과 정책 마련을 위한 최고의 연구기관으로 발전하길 바라며, 여러분 모두의 무궁한 발전과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성호 연구위원, '15년 상반기 공사비산정기준(표준시장단가) 심의위원회 참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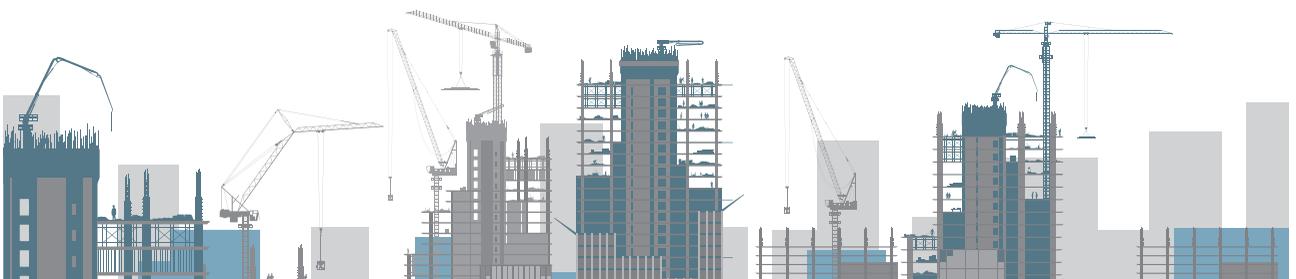
- 우리 연구원의 홍성호 연구위원은 지난 2월 24일, 정부과천청사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종합상황실에서 개최된 공사비 산정기준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실적공사비를 대체한 '15년 상반기 표준시장단가(안)을 심의하였다.
- 이날 심의된 표준시장단가(안)는 시장거래가격이 반영된 577 항목(우선 현실화 공종 77항목, 연관 67항목, 합성단가 433항목)과 실적단가에 6개월 물가상승분이 반영된 1,391항목이다. '15년 상반기 표준시장단가는 '14년 하반기와 대비하여 평균 단가상승율 4.71%, 총액 0.92%가 상승한 것이다.

이종광 연구위원,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실태점검 T/F 회의 참석

- 우리 연구원의 이종광 연구위원은 지난 2월 13일,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실태점검 T/F 회의에 참석하였다. 현장실태점검 T/F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도입한 제도가 현장에서 효과를 내고 있는지 조사·점검하고 방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지난해 11월에 구성되었으며 공정위 관계자 및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 이날 회의에서는 공정위가 지난해 도입한 부당특약 등 신규제도의 효과에 대한 조사결과 검토 및 평가를 수행하였으며, 하도급업체 권익보호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비용절감형 장수명주택 보급모델 개발 및 실증단지 구축” 과제 1차년도 평가회의

- 우리 연구원은 국토교통부의 「2014년 국토교통기술 연구개발사업」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비용절감형 장수명주택 보급모델 개발 및 실증단지 구축 연구단'의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해 9월부터 1차년도 세부과제인 “해외 신도시 진출 전략”에 관한 연구에 착수하여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다.
- 지난 1월 30일부터 31일까지 인천 강화에서 열린 1차년도 자체평가회의 및 워크샵에 참석하여, 그간의 연구 성과보고 및 자체 평가위원의 자문을 통해 연구 내용 보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오는 3월부터 “해외 신도시 진출방안” 2차년도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정부 공공건설 공사비 적정성 제고방안 발표

- 지난달 정부는 공공건설 공사의 공사비를 결정하는 방법인 실적공사비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공공 건설 공사비 적정성 제고방안” 을 발표하였다. 건설경기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어 온 부적절한 공사비* 확보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지난해 6월부터 논의되어 왔으며, 그 결과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개선방안이 마련된 것이다. * 2004년 도입된 실적공사비의 경우 10년간 단 1.5% 상승에 불과
- 이는 전문건설업의 생존과 권익을 지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 전문건설업계의 결과라고 할 수 있으며, 이번 대책을 통해 저가 하도급 등 부당한 갑을관계 및 입찰담합 등의 제반 문제점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

[공공건설 공사비 적정성 제고방안]

■ 실적공사비 제도개선 : 실제 시장가격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가격정보 수집/관리체계 등 전면적인 개편

개선방향	내용
제도 정상화	실제 시장가격을 반영토록 다양한 가격들을 수집, 검증하는 “표준시장단가” 제도 도입
제도 정상화시 까지 기존가격 탄력 적용	시장가격이 반영되는 수준을 감안하여 한시적으로 기존의 실적공사비 정보들은 탄력적으로 적용 (300억원 미만 공사에 적용 배제)
관리체계 개선	기존 발주청 위주 관리체계를 발주청·업계간 참여형 관리체계로 개선하고 공사난이도·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가격결정

– 실적공사비 정보 수집체계 전면개편



–공사 규모별 실적공사비 탄력 적용

구분		현행	개선안
300억원 이상	최저가 입찰	실적공사비 적용 공종은 낙찰률 99.7% 보장	▶ 현행과 동일 단가 현실화 수준 등 감안, 실적공사비 신축 적용 *100억원 미만: 영구 배제 100억원~300억원: 한시 배제
300억원 미만	적격심사입찰	별도 보장 없음 (실적공사비 가격 하락요인)	



중소·중견 건설기업 해외진출 맞춤형지원시스템 개발

- 국토부는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활용하여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를 발급하지 않은 250개 업체를 적발했다. 원도급자는 하도급 계약시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를 발급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으며,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시정명령 또는 영업정지 제재처분을 받게 된다.
 - * 예외) 하도급금액 1천만원미만 공사, 또는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불에 발주기관 및 원도급·하도급업체의 합의가 된 경우
- 국토부는 건설하도급 시장의 불공정 거래 개선을 위해 원도급업체의 보증서 발급여부를 발주처가 확인하도록 의무화해나가는 한편, 지자체·발주기관 합동으로 공사대금 미지급, 장비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일체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 특히,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활성화 일환으로 도입한 “건설기계 대여계약사실 신고 앱(App)”을 통해 건설기계대여업자가 휴대폰으로 건설기계대여 계약사실을 신고하면, 그 사항을 확인하여 보증미가입 업체도 점검을 강화함

전문건설공제조합, 보증한도 확대

- 전문건설공제조합은 지난 2월 10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보증한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합원 지원을 위해 보증한도 산정에 적용되는 보증위험가중치를 인하하여 실질적인 보증한도를 확대하는 한편, 조합의 선급금 공동관리제도에 따라 공동관리되는 금액에 대해서 보증한도와 수수료 인하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의 보증규정 개정안을 의결하고, 오는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주요 보증규정 개정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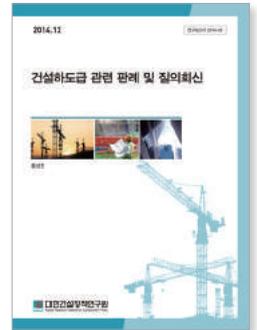
- 1 하자보수보증과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적용되는 보증위험가중치 인하**
 - 하자보수보증 위험가중치 인하 : 0.5 → 0.3
 - 보증기간 10년 이상인 하자보증 중 5년이상 경과한 건의 보증위험 가중치 50% 경감
 - * 장기 하자보증 발급이 많은 철콘, 토공, 강구조와 같은 업종의 수혜 폭이 클 것으로 예상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위험가중치 인하 : 3 → 2
- 2 선급금 공동관리제도 개선**
 - 선급금 공동관리 금액 보증한도 부여
 - 보증수수료 할인을 확대 : 20% → 50%
- 3 물적담보 이용한 추가 보증한도 부여**
 - 조합에 제공한 물적담보가 있다면 해당 담보의 유효담보가액의 100%를 보증한도로 활용

※ 계약보증 및 선급금 보증 수수료 5.3% 일괄 인하('15년 1월)



“건설하도급 관련 판례 및 질의회신” 발간

- 건설하도급 계약 및 관련 분쟁 발생시 판례·유권해석·해설 등의 법령 자료집을 통하여 대응하여야 하나, 현재 전문 연구기관의 관련 자료는 전무한 상황이다.
- 본 연구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상 건설하도급 관련 판례 및 질의회신을 알기 쉽게 정리·편집하고, 관련 쟁점에 대하여 해설을 수록하였다.
- 이에 건설하도급 관련 판례와 질의회신을 집대성하여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 및 건설업 상생 협력 발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을 기대한다.



“전문건설업체들의 국가 R&D 사업 참여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 발간

- 전문건설업은 연간 계약건수가 60만건 이상, 계약액은 70조원을 상회하고, 하도급을 담당하는 국가 건설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건설업계를 위한 별도의 국가 R&D 프로그램은 아직 마련되지 못한 실정이다.
- 본 연구는 「건설산업기본법」 상 건설산업 전문화·분업화 취지를 살리고, 국내 건설산업의 기반강화 및 전문건설업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 기술개발 여건이 취약한 전문건설업체들의 R&D 참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보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또한, 협회 회원사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도출된 전문건설업체들의 인식 및 의견을 토대로 전문건설기술 육성 등을 위한 국가 R&D 프로그램의 조속한 마련 등 정책 건의사항을 담고 있다. 본 보고서는 3월초에 주요 회원사 및 관계기관에 배포될 예정이다.